

전북도, 체계적 귀어·귀촌 지원 나선다

예비 귀어·귀촌인 위해 단계별·맞춤형 교육·상담·청년 어업인 영어정책 지원사업 등 추진

전북도가 귀어·귀촌인 단계별·맞춤형 지원에 나서며, 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도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민 등 예비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는 예비 귀어·귀촌인을 위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등 단계별로 수

요자 맞춤형 정착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촌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 어업인 영어정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어업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지급하며, 최대 월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어업영입비 및 어가 가계자금 활용을 위해 지원한다.

또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을 위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용자)사

업'을 추진한다.

대출금리와 저금리와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 한도로 용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로 지난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회

망자 포함) 또는, 전북도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력 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예비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해수부 주관 2020년 우수 귀어귀촌인 선발과정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 귀어인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어촌정착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한우' 품격 높인다

도,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전국 최초 의무화 추진

전북도가 신축년, 차별화된 가축시장 운영과 좋은 암소 선발·관리를 통해 '전북한우'의 품격을 높인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가축시장(지역축협 9개소, 생산자단체 1개소)에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 부모 소 확인검사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해 거래되는 한우의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해 전북한우 개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는 적극행정의 과제로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신규예산 12억원을 확보해 가축시장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의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1두당 2만원 가량의 확인검사 비용에 대해 50%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한다.

한편, 전북도는 좋은 암소 선발 및 관리사업의 지난해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76억원의 추가 소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유전능력이 좋은 암소 선발·관리를 통해 농가 스스로 저능력우를 도태해 좋은 송아지 생산에 따른 도축마리당 약 59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돼 연간 약 76억의 경제효과를 달성했다.

최재홍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량화는 데이터에 근거한 선발과 도태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 국장은 "가축시장의 부모 소 확인검사 의무화에 따라 시행 초기 농가의 불편이 예상되나 '전북한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행정과 생산자단체 및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는 도내 한우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운영

전북도는 최근 불법 촬영, 텔레그램 등 디지털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우정사업본부, '맘편한 임신택배서비스 개선 업무협약' 체결(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종석(왼쪽 세번째) 우정사업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안전부·우정사업본부 맘편한 임신택배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출산육아용품이 든 마더박스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지역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특화상담소는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고, 중앙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전북도,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 추진

전북도가 도정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고, 도민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검색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용역은 전북도가 보존하고 있는 종이와 시청각 기록물을 전자화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이중보존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전산화 대상은 도민의 재산과 권리

에 관한 기록물 및 건축 도면, 배출시설 허가, 농지전용 협의 관련 기록물 등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 기록물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록물 검색이 용이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 기록물은 도

민들이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행사·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직원들의 업무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도정 구현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상수도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전북도, 전문 인력·자재·장비 자원 공유 등 신속한 복구 지원

전북도는 상수도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전북도 통합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

도는 상수도 공급체에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유관기관간 협력적 공동 대응하고자 실무매뉴얼을 제작해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무매뉴얼은 작년 7월 전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상수도 위기대응 협약'의 일환으로 상수도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했다.

통합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도내 수도 전문 인력, 자재, 장비 등 자원을 공유해 시·군간 상호 복구 지원을 가능토록 했으며, 지자체별 상수도 공급망, 배수지별 급수현황을 정비했다.

또, 도내 수도시설 현황, 광역·지방간 비상연계 현황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정비해 실무자가 사고 현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수장 내 수질오염·관로 단수 사고 등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시스템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위기형태별 실무자 행동요령을 수록해 상수도 위기 대응 능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후, 전북도는 상수도 통합위기 관리 매뉴얼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합동 모의훈련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정수장뿐만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맞춤형 기술진단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전북도 위기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발생부터 복구까지 실시간 정보공유로 인접 시·군간 복구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로 사고 시 단수에 따른 물차·병물공급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복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돗물 공급뿐 아니라 사고 예방까지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